

4개 부처 장관 합동 ‘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을 위한 협조문’

출처 : 농림축산식품부·환경부·국토교통부·행정안전부 합동 보도자료 (2017. 11. 7)

◎ 정부는 평창올림픽을 앞두고, 조류인플루엔자 및 가축질병 방역대책 일환으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에 농림축산식품부, 환경부, 국토교통부, 행정안전부 등 4개 부처가 힘을 모아 추진하기로 했다.

○ 이는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제안하여 평창올림픽을 앞두고 정책을 함께하는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소통과 협력,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고 판단한 데에 따른 것이다.

○ 이에 따라 11월 6일 농림축산식품부, 환경부, 국토교통부, 행정안전부 등 4개 부처 장관이 합동으로 서명한 ‘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을 위한 협조문’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전해졌다.

○ “축산농가에게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은 어려운 과제입니다. 축산농가의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이 필요합니다.”

◎ 정부는 협조문을 통해 축산단체 요구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라 가능한 한 적극 수용, 담당부서 간 협력 강화, 중앙TF(업무추진반) 적극 활용, 축산농가에 문자 발송 등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에 힘을 보태 달라고 주문했다.

○ 첫째, 축산단체 요구사항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가능한 한 적극적으로 수용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.

- 지자체 실행부서(축산, 환경, 건축부서 등) 간 유권해석 및 적용기준이 달라, 지역별 적법화 추진실적이 크게 차이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.

- 지자체에서 축산단체 요구사항을 관련 법령에서 가능한 한 적극적으로 수용한다면, 적법화 추진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.

○ 둘째, 지자체 담당부서 간 협력을 강화하고,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반을 통해 행정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.
- 복잡한 행정절차로 인해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하는데 최소 5~6개월 이상 걸리는 시간이 상당부분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.

○ 셋째, 관계부처의 유권해석을 통해 적법화가 추진될 수 있도록 담당부서 간 이견이 있는 사항은 신속하게 중앙T/F(업무추진반)에 질의해 줄 것을 주문했다
- 추가로 축산농가에 무허가 축사 적법화 참여 확산을 위한 문자를 지속 발송하여 독려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.

◎ 2014년 3월25일 『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이 개정되면서 2018년 3월 25일 부터는 적법하게 가축분뇨배출시설을 갖추지 못한 축사에 대해서는 사용중지·폐쇄명령 등 행정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.

○ 그간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무허가 축사 개선대책 마련, 가축방역시설 등을 건축면적에서 제외, 이행강제금 경감 등의 제도개선을 통해 축산농가의 적법화 지원을 위해 노력해 왔다.

◎ 정부는 18.3.25. 이후 행정처분에 대비하여 무허가 축사 적법화에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농가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 나갈 예정이다

○ 농가별 위반유형을 분석하고, 축산농가의 노력 정도 파악을 위한 일제 보완실태 조사를 통해 농가별 맞춤형 지원 대책도 강구한다

- 지방자치단체의 행정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농림사업정보시스템* 내 '적법화 추진 상황' 코너를 신설하여 일제 보완실태 조사 결과도 실시간 제공한다.

* 농식품부가 지원하는 사업을 전산시스템을 통해 실시간 정보를 제공하고,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처리를 지원하는 정보시스템

○ 농가별 맞춤형 컨설팅 지원을 위한 지역상담반* 및 정부 합동 점검반**을 운영하여 현장 애로 사항을 적기에 해결해 나간다

* 건축사, 지역축협, 축산단체, 지자체 축산·환경·건축부서 담당자로 구성('17.7.28), 무허가 축사에 대한 적법화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현장에서 상담하는 방식

** 관계부처(농식품부, 환경부, 국토부), 농협, 축산단체 담당자로 구성하여 현장에서 유권해석을 통해 적법화 지원

◎ 민관합동 점검회의*, 중앙TF**를 통해 관계부처-지자체-축산단체·기관 간 협업을 확대하고, 적법화 추진과정에서 이견이 있는 사항은 관계부처의 유권해석을 통해 적법화를 지원한다

* 관계부처 국장, 시·도 부단체장, 축산 관련 기관·단체장 등이 참여

** 관계부처 과장, 지자체 담당과장, 축산 관련 기관·단체 담당자 등이 참여

◎ 정부 관계자는“지속 가능한 축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환경오염·악취문제를 낮추는 등 축산 환경을 개선하고, 축산분야 가장 큰 현안사항인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다”고 말했다

○ “축산업 전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므로, 이번 기회에 축산농가도 환경·위생·안전 문제를 해결하여 모든 축사가 법 테두리 안에서 운영되어 국민에게 사랑받는 축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기를 바란다”고 당부하였다.

〈붙임 :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을 위한 협조문〉

